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정치학 박사



지금도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이자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인류사적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위치한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원자력기술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단군시대 이후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AI시대를 선도하는 AI허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분주하다. 한편, 환단고기(檀檀古記) 문헌에 따르면 한민족의 역사는 거의 1만년에 육박하는 인류 시원문명이라고 한다. 필자는 현재 첨단 AI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난 13세기에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점령하고 천하를 호령했던 칭기스칸의 정복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문명사적으로 동이족 한민족의 혈통이 확실한 칭기스칸이 대부분의 아시아와 유럽지역 영토를 정복하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듯 다시 한번 한민족 운명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래를 앞두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20세기까지 지난 1000년간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로 칭기스칸을 선정했다.

그러면 어두운 중세시대를 마감시키며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세계의 정복자' 칭기스칸의 조상 계보는 어떻게 될까? 1240년 출간된 '몽골비사(蒙古秘史)'를 보면

위대한 한민족 계보의 역사, 칭기스칸

칭기스칸에서 위로 10대를 올라가면 모든 몽골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알토코와'가 나온다. 그녀에서 다시 10대를 더 올라가면 '부르테치노'가 나온다. 대부분 이 부르테치노가 당연히 몽골인으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놀랍게도 칭기스칸의 직계시조는 발해왕 대조영(大祚鸞)의 아우인 대야발(大野勃)이라는 사실이다. 칭기스칸은 그의 19대손이다. 지난 2016년 '고구려, 발해인 칭기스칸'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전원철 박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몽골어를 공부하다 우연히 '몽골비사'라는 서적을 접하게 된다. 중앙아시아 및 북방민족 사학자로 변신한 전박사는 칭기스칸 일가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에 관해 남긴 '황금의 책'에 나온 계보를 기반으로 신당서, 구당서, 삼국사기, 고려사 등 사서들을 시대 및 연도와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파악한 결과 칭기스칸의 정체를 한민족에게 정확히 알렸다.

첫째, 칭기스칸이 칸(황제)이 되기 전 어릴 적 이름이 테무진이다. 이 이름은 '원사', '태조기'가 보여주듯이 대무신, 곧 고구려 3대 대무신왕(大武神王)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테무진의 가족과 칭기스칸이 고구려 대무신왕의 후손임을 스스로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 이름을 두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몽골어나 투르크어의 '터무르진' 또는 데미르친 곧 철인(鐵人)이라고 보기도 한다.

둘째, 칭기스칸이라는 칭호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칭기스칸이라는 호칭을 발해왕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 걸중상 등의 호칭이었던 진국왕 또는 진국공의 옛 소리인 텡기스칸(Tengiz Khan)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칭기스칸의 손자 원세조 쿠빌라이 때 원나라를 방문한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자신의 동방견문록에서 25회나 칭기스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딱 한번만 제외하

고 24번을 칭기칸이라고 쓴다. 그 이유는 칭기칸은 바로 원나라 때 남인(南人)의 말로 진국왕이라는 소리이다. 곧 칭기스칸은 발해국왕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세계정복자 칭기스칸이 이름과 칭호를 통해 자신이 고구려 대무신왕의 후예이자, 발해국왕의 후손이라고 밝힌 것이다.

셋째, 몽골이라는 종족칭호 및 국명이다. 칭기스칸은 당시 이름도 없던 그 땅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하고 자신의 나라 이름을 처음으로 몽골이라고 하고 자신의 종족을 몽골이라고 칭한 까닭은 무엇인가? 오늘날 학자들은 이 말을 보통 송나라인들의 기록 흑달사라(黑鞏鞏)에 '타리명리'라고 하는 몽골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칭기스칸 자신과 자신의 종족이 몽골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말갈(靺鞨) 곧 고구려 말갈어로 말을 키우는 마을, 고을을 뜻하는 말골이라는 말이다. 테무진(大武神), 칭기칸(真國王), 몽골이 바로 그가 고구려 발해인의 후손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오늘날 BTS를 중심으로 하는 K팝의 인기는 한류와 함께 전 지구촌으로 전파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일부 청년세대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역사의식이 희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슈펜글러(Spengler)의 이야기 가 아니라더러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잘 인식하고 알아야 한다. 과거에 한민족 칭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다면 미래에도 한민족이 더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아시아 유럽대륙을 다스린 종족의 정체가 우리 뒷줄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 잊어버린 우리 역사의 진실을 다시 찾고 돌아보면서 세계 속에서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고

최명수

전남도의원



역대급 폭염과 기습적인 극한 호우가 번갈아 습격하는 이른바 '기후재난의 시대'가 도래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치(6~8월) 역시 이러한 위기가 결코 가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60%에 달하는 반면 낮을 확률은 단 10%에 불과해, 답아오른 대기와 뜨거운 바다는 수증기량을 급증시켜 언제든 좁은 구역에 엄청난 폭우를 퍼붓는 '극한 호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제 극한 호우는 과거 장마철(6월 하순~7월 중순)이라는 특정 시기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쏟아질지 모르는 기습적인 형태로 진화하여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재난이 되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요 공사 현장과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이 재난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 단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상습 침수 지역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사전 대비와 생활 속 실천으로 극한 호우 예방을

책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배수펌프장 등 방재 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배수펌프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농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기습 폭우 시 제 역할을 못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설 상시 점검과 노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관리 인력의 전문성 교육 등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남도 역시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과 함께 하천변 등 취약시설을 점검하며 '인명피해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실시간 맞춤형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제공, 민관 협력 확대, 저수지 스마트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상기후라는 거대한 자연재난을 인력으로 완벽히 막아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고된 위험을 알고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아 반복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人災)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다각적인 대비를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도 도민 개개인의 '철저한 안전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온전히 완성될 수 없다. 재난은 가장 예측하고 취약한 일상의 공간에서 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침수 대비'다. 저지대나 하천 인근,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평소 대피 장소와 연락망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비가 내리기 전 집 주변 배수구와 우수관을 미리 청소해 물길을 열어두는 작은 실천이 침수를 막는 첫걸음이다.

만약 침수가 시작됐다면 즉시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신속히 탈출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자 역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등 침수 방지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반 붕괴와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이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만약 평소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임야 경사면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땅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명백한 산사태 전조 증상이다.

따라서, 위험 지역 주민들은 전조 증상을 느끼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대형 수목이나 균열이 간 담장은 정마 전에 미리 정비해 줘야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기상 정보의 생활화'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다. 지자체의 실시간 마을방송과 재난안전 통보에 귀를 기울이고, 기상청 앱을 통해 실시간 강수 예측 영상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대피 명령이나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지체 없이 안내에 따라 행동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가물 그루터기는 있어도 정마 그루터기는 없다'는 옛 속담이 있다. 정마가 남기는 상처는 그만큼 깊고 매섭다는 선조들의 경고다. '설마' 하는 방식이 불러온 결과는 견줄 수 없는 불행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대비와 실천이야말로 전남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 하나도 허점도 남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취재수첩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임영진

사회부 차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문자 메시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일 '개인정보 유출 조화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한 메일에 담긴 문구로, 개인정보 유출을 알리는 기압의 사과문이다.

익을 만하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자 이용자들에게 각종 피해 예방 수칙이 안내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방법과 보이스피싱 대응센터 연락처도 함께 공지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관리상 허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이용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더 많다. 유출은 기관이 당했는데, 뒤처리는 이용자가 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주민등록증이자 중요한 자산이다. 한 번 유출되면 회수할 수 없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오랫동안 남는다.

범죄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 사는 지역도 알고, 가입한 서비스도 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 범죄는 더욱 정

교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진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부터 바꾼다.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와 전화를 의심하게 된다. 스미싱 링크를 조심해야 하고, 수상한 애플리케이션은 삭제해야 한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찾고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사고 이후의 풍경은 늘 비슷하다. 기관은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바꾼다. 책임과 부담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유출 이후의 사과와 수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반복되는 유출 사고를 당당한 일처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업과 기관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사설

정부 '남부권 반도체 벨트' 반드시 실현되어야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 구상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부산-구미 남부권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패키징 등 유망 분야를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기존 클러스터(수도권)와 연계한 반도체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즉,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반도체,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을 특화 조성, 이를 한데 묶는 반도체 벨트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 반도체 메모리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AI용 고성능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패키징을 차세대 승부처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AI 등 고성능 반도체 제조의 핵심기술로 반도체 칩을 단순 포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 처리 고속화, 소형화, 저전력화 등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전남광주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세계적인 패키징 기업인 엔코도 1조원을 들여 광주 첨단지구에 자리잡는 광주 공장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글로벌 기업 투자까지 이어질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저렴한 부지, 인력 등을 보유한 전남광주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전남·광주는 반도체 맵 일지의 기본 조건인 전력, 우수, 인재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광주에는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AI 핵심 자원인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실증 장비·AI 반도체 등 인프라를 집약한 AI 집적단지 생태계가 구축돼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반도체와 AI 분야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 재생에너지 기반과 넓은 산업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나주에는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전력 등 에너지와 인재 양성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정부의 이런 구상이 실현돼 내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활시가 반도체 벨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학 시국선언, 공정투표 시스템 계기되길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면서 관련 성명과 선언문을 집결한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한 것이다.

지난 4일 '한표의 기록'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15일 오후 3시 현재 215개 대학(242개 캠퍼스)에서 발표한 성명과 시국선언문 306건이 수집·계시돼 있다. 이 사이트는 "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는 취지로 전국 대학 학생회와 학생단체, 개인이 발표한 성명과 대자보 등을 모아 공개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송원대, 남부대가 성명에 참여했고, 전남에서는 세한대, 국립목포대, 국립목포해양대, 동신대, 한국에너지공대, 국립순천대 등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들의 60% 이상은 성명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등을 규탄하는 내용도 절반 가까이 나왔다.

이들의 시국선언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1인 1표'라는 투표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무너진 것을 규탄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청년 세대는 철자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이번 사태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그리고 청년과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관위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 대학들이 이번 사태를 진보와 보수의 정쟁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대의민주주의 기본권 방어 상황을 기존 정치권이 알팍한 정치 공학적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소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참정권 수호'라는 절대적 가치만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번 사태가 훼손된 현행 투표시스템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는 성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자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